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지역은 채워서 살려야”

이용섭 광주시장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는 국토 동맥경화 일으켜 성장잠재력 저하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 차원 접근해야 기업하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어릴 적 이야기 하나. 나는 시골에서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났다. 집안이 형제들로 북적였지만, 여름에는 별 불편 없이 지냈다. 그러나 문제는 겨울이었다. 땀값이 부족하다 보니 안방에만 불을 때었다. 형제들은 자연스레 따뜻한 안방으로만 모여들었고, 모두 비좁고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 각자 방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차가운 방으로 섰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가 땀값을 구해 방마다 군불을 때셔야 비로소 형제들은 흠뻑 젖었다.

어릴 적 이야기 둘.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펄프샘(짜두샘)이 있었다. 펄프샘을 사용하다 보면 물이 빠져버려, 물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한다. 이것이 훗날 '마중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마찬가지 이치다. 사람과 돈과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군불을 때주는 마중물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첫 추월했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이러한 인구집중현상은 자연스레 경제와 정치·사회활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빈익빈 부익부.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장사가 되지 않아 사람과 기업은 더욱 수도권으로만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면서 국토 전체적인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사회 때는 수도권으로 돈과 사람을 집중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간 경쟁체계'였다. 달리기에 비유하면 400m를 잘 달리는 선수 하나만 있으면 육상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지역마다 고유함과 독창성을 살려서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 간 경쟁체계'다. 400m 계주 시대다. 4명의 선수가 모두 균형 있게 잘 달려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세종형 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은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군불'이고 '마중물'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수도권 위주의 '일극집중' 국토관리·도시관리의 관념을,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살려 전국이 균형 있게 잘사는 '다핵분산' 구조로 혁신하는 첫 출발점이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이자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그 근저에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문제가 맞물려 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기회다. 우리 광주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가 이같은 분위기에 합승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광주는 인공지능, 자동차, 에너지, 문화예술 등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가 절실하고 이들 기관 역시 광주에 오면 자기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은 200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통근 양보로 나주에 공동혁신도시 유치를 합의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전력을 유치했고, 유수의 공공기관 15곳이 그 뒤를 따랐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또다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가 해법이다.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시민들이 광주·전남 전체 발전을 위해 전남(나주)에 통근 양보했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광주·전남 시민들이 상생과 호혜 차원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광주로 유치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목표가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배대에 살을 붙여야 한다. 1단계 시책들이 균형발전에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면 이제는 기업과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역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정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노력들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도록 군불을 지펴주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동시에 지역이 자생력을 갖고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 뉴딜, 상생과 안전의 사람중심 휴먼 뉴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다. 중앙정부가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면, 지자체는 그 지역에 동지들 틈 기관들이 지역 특성과 시너지효과를 내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국가발전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당장의 효과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사람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건전한 논의와 성숙한 상생의 지혜를 모아내야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동반성장이다.

“소멸위기지역 집중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김영록 전남지사

공공기관 2차 이전 총량 고려해 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시급 한국판 뉴딜 지역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부로 개편 필요



팀워크 핵심으로 한 대표적인 스포츠로 축구가 있다. 11명의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제 기량과 역할을 다할 때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다. 국가 역시 구성요소인 지역이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고루 잘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국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말 그대로 균형(均衡)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최상위 척도로 '인구'를 꼽을 수 있다. 1970년부터 2018년까지 50년간 우리나라 권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충청권과 영남권이 각각 137만명과 364만명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122만명이 감소하였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정부 출연기관 70%,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고 인구가 50.2%인 2600만명이 살고 있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까지 더해져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전남의 경우 22곳 중 18곳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임을 인식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 행정수도 이전정책 등을 추진했지만 지방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많이 부족할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는 해외 진출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집값을 잡기 위한 명분으로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역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다. 그 중심에 지방이 있다.

미중유의 코로나19 대응은 OECD 37개 모든 국가가 올 한 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인 불황을 야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도 'K-방역'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발상과 과감한 결단력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방역이 만들어낸 것이다.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실계를 준비하고 있듯이, 전라도에는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가 있다.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이 가진 섬과 바다, 황금들녘, 하늘과 바람 등 풍부한 블루 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해 전남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발전전략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방향성과 핵심사업이 일치한다.

지난 7월 14일 정부의 발표내용에 '해상풍력'과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이 핵심 현안으로 대거 포함되어 전남도의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루 에너지·관광·바이오 의약·미래 운송기기·농수산 생명산업·스마트 시티 등 한국판 뉴딜을 전남판 뉴딜인 블루 이코노미가 선도하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 다만 나라와 지방을 동시에 살리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은 보다 획기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첫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지역별 공공기관 총량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배정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363개소 가운데 수도권에 여전히 156개소(43%)가, 충청권 86개소(23%), 영남권 74개소(20%), 호남권 29개소(8%) 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지역별 공공기관 총량을 감

안해 배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관성, 지역 자원과 산업의 연계성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전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30개 기관을 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둘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정책과 재정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경상북도와 상생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특별법을 공동 제정하기로 협의했다. 특별법안에는 공공기관 우선 배정, 국책사업 우선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축소,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을 담을 예정이다.

셋째, 지방 주도의 진정한 균형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담보되어야 한다. 지방하천 정비 등 급속 전환사업 재원의 지속 보전과 함께 지방교부세율 인상, 사용 후 핵물질·유해화학물질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전남판 뉴딜 등 지역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을 지향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부의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국가균형발전부'로 개편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부를 통해 지방을 대변하고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관 또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수십 년 동안 국가와 지방의 과제로 추진되었지만 성공은 쉽지 않았다. 부동산 폭등, 인구 과밀화와 과소화, 교육 불균형, 양극화 등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만이 나라와 지방을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The 청렴하면 더 행복해요!

시민과 함께 청렴한 광주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